#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심사 착수

# 17일 수랑·마륵·송암·봉산 등 4개 공원 대상 '공공성 향상 위한 기준안' 마련 후 제안서 개봉

광주시와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거 버넌스가 수랑·마륵·송암·봉산 등 광주 지역 4개 도시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제안서 심사 결과 선정될 우선협상대 상업체와의 협상 시 '공공성 향상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한 뒤 제안서를 개봉하기 로 해다

광주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광주시 청에서 민관거버넌스 제4차 회의를 갖고 1 단계 사업 대상 공원의 개발 적정규모, 2단 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재검토, 공원 해제 여부 등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광주시가 공공성 향상 협상 기준을 제시할 경우 1단계 공원 심사일정 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관거버넌스는 먼저 제안서 제출업체에 국토부의 개정지침에 따른 서류 반려 및 재접수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기로 했으나, 제출업체모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성 향상을 위한 기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이 비공원시설, 즉 아파트 단 지 조성 규모 축소다. 국공유지 면적, 고도 100m 이상이나 경사도 25도 이상, 자연생 태도 1·2등급 등 개발 불가능지역 등을 제 외하고 개발 규모를 산정하면 기존 30%에서 10%대까지 개발면적의 규모가 감소할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주장이다.

지난 13일 열린 도시공원 조성소위원회는 2단계 사업 제안서 공고 시 공유지는 제외와 함께 2단계 대상 공원 가운데 운암 신용공원과 영산강대상공원의 제외, 송정공원 부분 해제, 중외공원 내 비엔날레지구제척 등을 논의했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역 유력건설업체인 호반·중흥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중앙·일곡공원에 대해서도 공유지 제외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지역의 대표공원인 중앙·일곡공원 개발 자체에 반대하는 여

론이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중앙 공기업인 LH가 공원을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국토교 통부의 개정 지침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광주시가 기존 대책만 고 집할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공원 일 몰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해둘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추억의 가을 거리 버스킹

'2017 음빛고을거리 버스킹 공연'이 지난 14일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광주시청 국화정원 인근에서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광주테크노파크·광주복지재단·광주영어방송

####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블라인드 채용 외면

#### 학벌없는 사회시민모임

문재인 정부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산하 일부출연·출자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광주시 출연·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시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등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

역과 학력, 사진 부착 등을 금지해 직무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9월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해 블라인도 채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광주문화재단은 직무능력과 연관없는 응시자 학력사항 기재를 요구했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는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는 물론, 학력과 성적, 외국어 능력 등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 심사힌 것으로 드러났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우선협상대상자 우진산전과 계약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차량 시스템 납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지 한 달 만에 최종계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15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주) 우진산전과 도시철도 2호선 차량 제작구 매사업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다.

계약금액은 792억원으로, (주)우진산전의 투찰금액과 동일하다. 사업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년2개월간이며, 차량 72량과 검수시스템을 일괄 제작하는 방식이다.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차량은 총 36편으로, 1편당 2량으로 운행되며, 1편당 수송가능 인원은 입석을 포함해 154명이다.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

역~첨단~수완~시청 구간 41.9km 길이의 순환선으로, 4분 단위로 1편(2량)씩 운행되다

시는 공정경쟁을 통해 차량형식을 결정 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조달청에 차량 제 작구매 계약을 의뢰한 바 있다. 조달청 기 술평가와 가격평가 결과 고무바퀴 업체인 우진산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돼 광 주시와 기술협상을 마치고 최종 계약을 체 결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방향이 확정됨에 따라 각 분야별 실시설계를 본격 추진해 당초 제시한 목표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1단계 일부 구간을 우선 착공, 2022년에는 1단계 구간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기자 노트

# 국방부 5·18특조위 박수 받으려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 엄군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 격 의혹 등을 조사하는 국방 부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이하 특조위)는 지난 11일 각 언론사에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공지를 보냈다. 그동안 특조 위의 조사활동이 비공개 방

식으로 진행됐던 터라 갑작 스런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 기대감 내

그런데 특조위는 공지 40여분 만에 '기자회견 날짜 전달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하루 연기하겠다고 재공지했다. 특조위가 기자회견을 하루 더 묵히면서 이들이 밝힐 내용에 대한 기대치도 더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 12일특조위가 처음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은 아쉬웠다. 새롭게 밝혀낸 사실도, 성과로 꼽을 만한 조사 결과도 눈에 띄지 않아서다.

특조위는 이날 그동안의 활동을 소개한 뒤 국방부 자료 중심으로 조사를 펼쳤다고 설명했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기무사령부 비공개 존안자료(10권분량)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5·18 당시 전두환전 대통령의 행적이 담겨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기대감이 무색할 정도였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동안 5월 단체 등이 제기해왔던 신군부에 의한 5·18 기록 왜곡·조작을 뒷받침할수 있는 자료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최소한의 문제 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실제 기자회견 전날인 지난 11일 전남지방경찰청이 내놓은 5·18 자체조사 보고서에서 신군부가 경찰 기

록까지 왜곡한 사실이 밝혀 졌던터라 답답함이 더했다. 특조위는 이날 기록 위주 조사에 한계를 느낀 듯 헬기

김 용 희 사회부기자

S

사격 관련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적극 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는 입장도 덧붙였다. 또 기무 사에서 새롭게 내놓은 25권 (8000쪽) 분량의 자료분석에

내심 기대를 거는 모습도 내비쳤다. 하지만 특조위의 남은 활동기간이 40여일에 불과한데다, 소극적으로 비치는 활동을 봤을 때 광주시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특조위 출범 당시 5·18기념 재단과 광주 5월 단체들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도,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한계 등을 예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벌써부터 특조위가 주저 앉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다. 활 동했던 시간보다는 활동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다.

또 현재 우리가 5·18진실 규명을 위해 믿을 수 있는 곳은 특조위 뿐이기도 하다. 가장 길었다는 추석 명절까지 반납한 채 조사에 임한 특조위의 숨은 노력도 마지막까지 기대를 걸게하는 요인이다.

특조위 조사가 오는 21일이면 반환점을 돌게된다. 특조위는 지난 37년간 단혀져 있던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오는 11월30일 활동이 종료됐을 때 비난이 아닌 박수를 받는특조위의 모습을 기대한다.

/kimyh@kwangju.co.kr

#### 전남도 올 청년사업비 859억 추가 지원

전남도가 올해 청년사업비로 859억원 을 추가 지원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2017 하반기 청년발전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청년 지원시책 사업을 기존보다 8개 늘어난 총 79개 사업으로 확정했다. 사업예산도 859억원 증가한 3019억원으로늘어났다. 추가 사업에는 ▲청년 마을로프로젝트(마을 청년활동가 일자리 창출) ▲청년 관광기획자 양성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개설·운영(청년과 전남도 1대1 매칭 적립) ▲다문화 가족 성장지원 ▲청년 창업농장 조성 등 획기적지원시책이 다수 포함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발전위원 회 위원 11명을 추가 위촉했다. 청년 의 견을 정책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여 성, 일자리, 금융, 복지 등 다양한 분야 의 청년을 포함시켰다.

위원들은 청년정책에 관한 현실적 보 완책과 함께 최신 트렌드 맞춤형 아이디 어를 쏟아내며 큰 공감을 얻었다. 순천 출신의 한 위원은 반려견 장례식장을 찾 아 수도권까지 가야했던 사연을 토로하 며 '반려견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일자 리 창출'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구 감소 문 제도 돌파구가 없다"며 "청년들의 제안 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확대된 청 년 발전 시행계획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 는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